

정부, 금강산 보조금 폐지 검토

美 압박에 한발 물러서...“PSI 참가 폭 조절”

美의회 조사국 극비 방한 개성공단 등 조사

미국이 유엔 결의안 1718호 채택 이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대북 제재가 금강산관광 등 사업 수정과 PSI(확산방지규정) 참여 확대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당초 정부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 및 PSI는 유엔 결의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의 강경 입장이 전해진 뒤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금강산관광 수정되나=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한 강연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안보리 결의 이행 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금강산관광을 더욱 문제 시하고 있다. 전날 금강산관광을 두고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 같다”고 발언해 파장을 불러왔던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금강산관광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한 걸음 물러났지만 “개성공단의 목적은 경제개혁이라는 미래를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지만 금강산관광의 목적은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는다”고 금강산관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않았다.

정부 기류의 변화도 포착되고 있다.

전면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두 사업의 지속 여부와 관련, “운용방식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의 요구와 조화시키고 부합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조정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겨울 비수기에 통일교육 차원에서 학생이나 이산가족 등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되던 관광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다.

◇미 의회 조사국 극비 방한·조사=미국 의회조사국(CRS) 조사단이 최근 극비리에 한국에 들어와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김동근 개성공단관리위원장과 임주기업 대표로 박성철 신원 회장,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미 의회조사단은 그동안 남북 교역과 북한 지하경제규모 관련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했지만 직접 조사단을 파견해 남북경협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주한 미 대사관을 물론, 외교부에도 방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PSI 참여 확대 어떻게 되나=PSI 참

여와 관련한 정부 공식 입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내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우리의 참가 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인 미국이 작심하고 PSI 참여확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PSI가 야기할 수 있는 남북 간 긴장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의표시 차원에서 PSI 참여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8일 한국의 PSI 참여확대 문제에 언급, “PSI는 어떤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시행은 자발적인 것”이라며 “왜 PSI가 언론에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콘돌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이소 다로 일본 외상이 18일 미일 외장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터 “부시 취임후 모든 틀 파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등을 돌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1994년 자신의 중재로 성사된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고 18일 한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여만에 모든 틀이 파괴됐고 북한은 ‘악의 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달았으며 북한에 대한 태도 역시 급속도로 변했다”면서 제네바 합의와 그 후속 조치를 “모두가 휴지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1994년 카터 당시 대통령은 사망한 전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을 만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동결과 핵연료 재처리 중단, 유엔 사찰단 수용, 한국과의 대화 등의 합의 내용을 이끌어 냈다.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후계자가 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역시 클린턴 행정부측에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에 따라 북한에는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중유도 제공됐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내용을 다룬 책 ‘위기의 순간(A moment of Crisis)’을 저술한 매리언 크릭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2002년 이후 북한이 6~10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재처리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레이니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직전에 분명한 전쟁 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셀링 “북-미 대화만이 타개책”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00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셀링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계속 거부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셀링 교수는 18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2006’에서 ‘놀라운 60년’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하면 북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 이를 꺼리고 있다”며 “그러나 직접 대화가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면 이같은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셀링 교수는 한국·대만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신념만 확고하다면 북한의 지난 핵 실험, 나아



가 2번째 실험이 실행되더라도 NPT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만약 북한 정권이 자기 방어를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다면 유엔 결의 등을 통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이후 지난 60년동안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금기로 여기고 단 한 번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북한이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北 모험 어디까지

위기국면 정면돌파...2차 핵실험 긴장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지난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또다시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면서 북한의 무분별한 ‘마이 웨이’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관련 장비들을 이동시켰다는 알려지는 등 추가 핵실험 징후와 관련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추가 핵실험 외에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인출을 통한 플루토늄 추가 추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해상검색을 둘러싼 직접적 무력충돌, 서해교전과 같은 NLL(북방한계선) 침범 등 국지적 도

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외무성이 1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금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전면적인 제재가 강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북한 언론이 핵실험 이후 연일 ‘선군’과 ‘자주’를 강조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1차 핵실험 후 1주일 만에 인민군 협주단의 공연을 관람, 공개활동을 재개한 것도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치킨 게임’으로 본다면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복해 절대로 먼



미국 과학국제 안보연구소(SIS)는 상업용 위성 디지털 글로벌북가 북한의 핵실험 나홀 뒤인 지난 13일에 찍은 핵실험 추정장소 현장사진을 웹사이트를 통해 16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이곳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 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양보’와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특히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거나 중국 등의 경제제재로 인해 김정일 체제 붕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까지 몰릴 경우에

는 ‘극단적인 도발’로 나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일각의 고위층 탈북자 A씨는 “체제 붕괴의 위기까지 온다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로스 “부시가 北 핵실험 불러”

‘투자의 귀재’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저먼트 회장은 18일 부시 정권의 잘못된 대북 정책이 북한 핵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소로스 회장은 이날 ‘세계지식포럼 2006’ 개막식에서 자신의 최근 저서인 ‘오류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북핵 상황은 부시의 잘못된 정책(테러와의 전쟁) 결과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부시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 김대중 대통령이 방한해 햇볕정책을 요구, 폴린 파월 장관은 이를 지지했지만 부시 대통령이 결국 반대해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은 탄압이 심한 체제인데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워낙 가까워 군사적 선택이 쉽지 않고 다루기 힘든 나라”라며 “그럼에도 미국은 악의 축 등의 표현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정권 교체를 거론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소로스 회장은 “이 같은 외부의 위협이 오히려 북한 정권의 기반을 더 단단히 만들었다”며 외부 공포를 제거한다면 북한 정권이 태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는 북한의 핵 실험이 새로운 일이 아니므로 해외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을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싸움’으로 규정하고 이 잘못된 결정이 이라크에서 60만명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KISA 한국정보서비스

행복한 세상이
문서화된 서비스

www.kisa.or.kr

습관성도 바뀔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더”

유엔센터가 함께 합니다!

www.ucan.or.kr

UCAN Center

www.ucan.or.kr